투데이 칼럼

북한 꽃제비 실태

정 복 규
논설위원 · 통일교육원

지난 2020년 어느 북한 여성이 뼈만 남은 처참한 몰골로 토끼풀을 뜯는 영상이 국내외 TV로 방송돼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북한의 20대 '꽃제비' 여성이었다. '꽃제비' 라는 말은 '집 없이 떠돌면서 구걸하거나 도둑질 하는 유랑자' 를 가리킨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주민들 간에 유행된 신조어다. 2001년 발표된 북한의 장편소설『열병광장』에 꽃제비에 대한 설명이 등장한다.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시장바닥을 헤매는 집 없는 아이들을 꽃제비로 표현했다.

요즘 북한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떠도는 꽃제비가 여전히 늘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경우 안전부가 각 구역의 장마당에서 꽃제비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꽃제비들은 수용시설을 뛰쳐나와 먹을 것을 구하고 있다.

라남구역에는 고아를 수용하는 보육원과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등 단계별 수용시설들이 여러 개 있다. 꽃제비들은 대부분 청진시 라남구역과 부윤구역의 보호시설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다.

북한에는 고아 신세인 어린 꽃제비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용시설에서 탈출한 노인층도 구걸 행각을 많이 벌인다. 청진시 부윤구역에는 무의탁 노인들을 수용하는 노인 요양시설이 있다. 이곳에 수용된 일부 노인들도 뛰쳐나와 장마당에서 구걸하며 꽃제비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부모 잃은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어 주겠다면서 전국에 현대적인 수용시설 건설을 지시했다. 하지만 식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난방조차 열악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아이들은 다시 꽃제비가 되어 구걸을 하고 있다. 이들 꽃제비들은 단속조가 떴다 하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설령 잡혀도 거칠게 반항하기 때문에 단속이 결코 쉽지 않다.

혹독한 추위에 구걸을 하며 떠도는 꽃제비들은 모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이다. 당연히 안전원의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기 일쑤다. 꽃제비들은 강변과 다리 밑, 그리고 장마당 인근에 구덩이를 파고 거적을 깔아 놓은 은신처에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어느 단속반은 꽃제비 움막들을 찾아내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를 본 꽃제비들은 처참했다. 나라에서 굶주린 꽃제비들을 돌봐주지는 못할망정 추위를 피할 거처마저 불태우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당국의 잔인한 처사를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북한에서는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화되던 1990년대 중반부터 꽃제비가 급증했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꽃제비들은 더욱 늘었다. 식량 사정으로 먹고 살기 힘든 가정이 늘었기 때문이다. 며칠씩 굶다가 전 재산을 모두 헐값에 팔아 쌀을 사먹었다. 그리고 더 이상 팔 게 없어 집마저 팔고 꽃제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북한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국경 접근자에 대해 사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감시의 눈을 피해 중국 국경도시로 넘나들고 있다.

실제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인근에 북한 꽃제비가 목격되고 있다. 이들은 신의주나 의주군 일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단둥과 신의주 사이에 흐르는 압록강은 강폭이 넓다.

게다가 중국이 최첨단 카메라를 이용해 상시 감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사격' 명령까지 내린 상황이다. 강을 건너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이 꽃제비들의 중국행을 막지는 못한다.

꽃제비는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 발각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으로 숨어들어 간다.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현에서도 꽃제비들이 북한과 중국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혜산에도 꽃제비가 늘어났다. 7-8명 정도 무리를 지어 다닐 정도로 패거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강가에 가서 고철이나 플라스틱 물병을 줍고 다닌다. 그리고 밤에 몰래 중국에 넘어가 농작물 등을 훔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적극적으로 꽃제비를 잡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독자제언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시행

오는 5.13일부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하여 주의의무가 강화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동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지위를 가지며, 현행 도로교통법과 같이 자전거도로 통행원칙으로 보도 통행불가하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원동기면허 이상)가 신설될 예정이며, 무면허 운전,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처벌과 운전자 주의의무(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과로 및 약물 등 운전)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기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던 단순 음주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그리고 범칙금 만원을 부과하던 지정차로 위반 항목도 하위법령을 정비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발생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이는 보험 및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스쿨존 내 사고, 인피 도주사고, 음주 인명피해 사고야기 시 특가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됨을 명심해야 한다.

전근수 무주경찰서 민원실장 경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저항 결의 다지는 미얀마 시위대

최근 미얀마 양곤에서 반 쿠데타 시위대가 신발에 꽃을 꽂은 채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펴 보이며 카마윳 지역에 모여 있다. 이들은 반 군부 구호를 외치며 마을과 시장을 돌면서 시위를 벌였다.

사 설

통일비용에 대한 오해

통일비용에 대한 오해가 많다. 통일이 되면 막대한 돈이 지출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분단비용에 대한 사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선 분단비용이 줄어든다. 남북한이 보유한 군사장비는 물론 정규 병력과 예비병력, 군사훈련 등에 투입하는 비용이 막대하다. 분단비용의 해소는 통일 이후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다.

그리고 통일비용은 분단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총 인구는 8천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된다. 당연히 노동과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생활공간을 대륙으로 확장할 수 있다.

물류망이 대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의 남북한은 섬보다도 못한 불리한 여건이다. 대륙으로 가는 물류망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물류비를 감수하고 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육로를 통해 중국과 시베리아 진출이 가능해진다. 수송비와 수송 시간을 크게 절감하게 된다.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송유관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다.

통일은 전쟁과 대결로 이어져 온 굴절된 민족의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기도 하다.

통일을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은 국민적 일체감을 고취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이뤄냈다.

이제는 통일을 통해 부강한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북한 이탈 주민의 인도적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증오심, 전쟁 위협, 그리고 이념적 갈등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통일은 한반도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먼저 통일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전주시 주민센터 이름이 헷갈린다

전주 시내 일부 주민센터 이름이 너무 헷갈린다. 최근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 주민센터 건물 외벽과 현판에 '평화1동 행정복지센터' 라는 낯선 문구가 붙었다. 주민센터가 갑자기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명칭이 변경된 것을 아는 주민은 거의 없다. 현재 전주 지역에는 3곳의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의 주민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 맞춤형 서비스와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거점을 추진했다.

그 뒤 평화1동, 삼천2동, 인후3동 등 모두 3곳이 선정돼 행정복지센터 명칭이 부여됐다. 하지만 명칭만 변경된 것일 뿐 업무는 일반적인 주민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너무 흔하게 쓰이는 '센터' 라는 말도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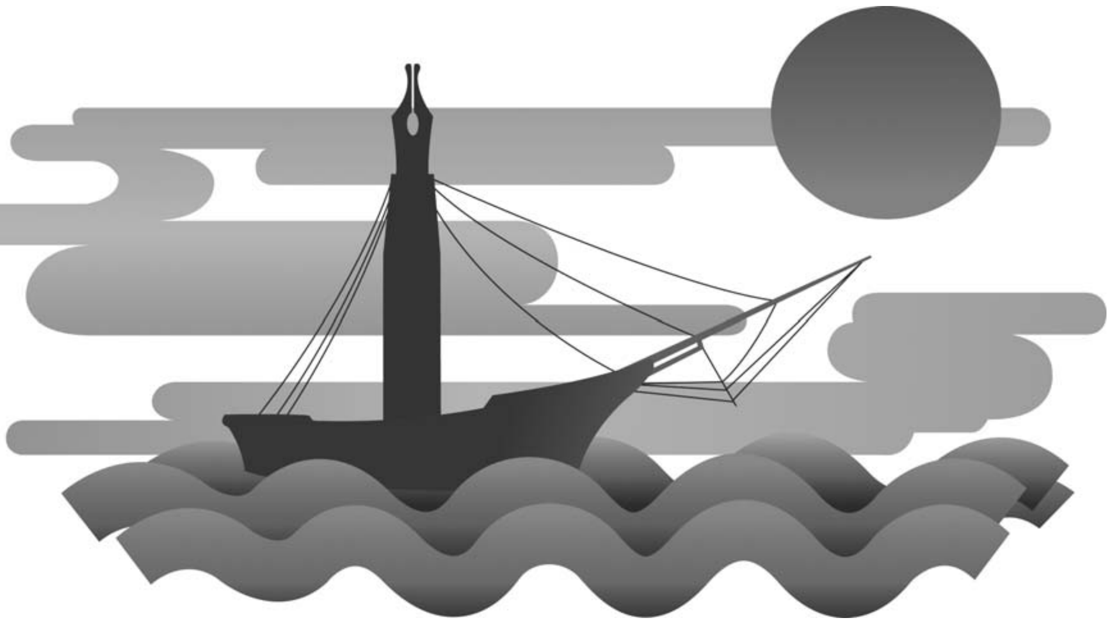
카센터, 스포츠센터, 종합검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애견센터, 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사회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그랜드컨벤션센터, 콜센터, 우주센터, 재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심부름센터, 프레스센터, 영양센터, 회센터, 물류센터, 고객센터, 암센터, 평생교육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센터가 너무 많다.

당초 동 주민센터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동사무소' 혹은 '면사무소' 라는 명칭이 어때서 '주민센터' 로 바꾸었는지부터 궁금하다. 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행정조직이다.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 없이 주민센터 명칭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칭 변경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주민센터의 기능 보강을 명문화해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분명한 절차를 통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 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